

‘사실로서의 재일’과 ‘변하지 않은 일본’의 교차

유혁수·신기영

1. “시즈오카 본명 재판”이 말해주는 것

2015년 10월 14일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시즈오카 본명 재판” 항소 심은 제1심에 이어, 판결의 역점은 조금 달라졌지만, 역시 원고 야마하라 신이치(본명 제신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 3세인 야마하라가,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던 정화조 회사의 일본인 사장이 수차례에 걸쳐 그에게 본명(한국명)을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고, 종례시간에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1심에서는 재일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본명과 통명(일본명)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는 개인의 정체성 내지는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행위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숨기고 싶어하는 재일한국인이라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만 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했다. 항소심에서는 재일한국인의 경우 통명을 사용해온 역사적 경위가 있는바 외국인등록증명서(2012년 이후는 주민표)에 본명과 아울러 통명이 병기되는 등 행정상으로도 배려해왔으며, 본명을 사용하면 생길지도 모르는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생각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본명 사용을 종용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통명 사용으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평온과 프라이버시라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지지했다.¹

현재 재일동포사회의 구성원을 보면 우선 한국·조선적 소지자 중에서 특별영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정주자(올드커머)는 35만 명 이하로 줄었고, 신정주자(뉴커머)와 일시 체류자가 15만 명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이미 35만 명을 넘었고 재일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더블’ 역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재일동포사회의 구성이 말해주듯 재일동포사회는 올드커머에 이어 한국인의 일본 이주에 의한 다양화, 귀화자와 더블의 존재가 말해주는 복합화, 혼효화의 흐름 속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이 언어적·문화적으로 동화되는 ‘사실로서의 재일’이 진행되어왔다.²

김태영이 말하였듯이 1세에게는 민족이 ‘자유’였지만 2세 이하에게는 ‘부자유’의 상징이다.³ 즉, ‘민족’이 일본사회의 차별과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고 저항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에스니시티의 원초적·객관적 본질주의와 도구적·주관적 비본질주의가 공존 가능했던 1세들과 달리, 2세 이하는 민족이 자명하지도 본질적이지도 않은 ‘구축’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때 2세 이하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딜레마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신”, 즉 재일조선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과 객관적 본질주의에서 해방된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였다.

〈다카쓰키시 무궁화회〉(高槻市むくげの会)가 주최한 〈재일조선인 어린이회〉 어린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김태영의 “유연한 정체성” 개념은 어린이들이 의식적으로 연출하기를 기대하고 요구되는 ‘재일조선인으로서

1 平成25年(ワ)第569号損害賠償請求事件(静岡地裁平成27年4月24日判決); 平成27年(ネ)第3249号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東京高裁平成27年10月14日判決)

2 여기서 재일동포는 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조선에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는 경우를 총칭한다. 재일한국·조선인은 각각 한국적과 조선적을 갖고 있는 경우를, 그중에서 특별영주자를 중심으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전부터 정주하고 있는 자를 구정주자(올드커머)로, 1965년 이후,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건너와서 정주하고 있는 경우를 신정주자(뉴커머)로 정의한다.

3 金泰泳, 『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ックスを超えて: 在日朝鮮人のエスニシティ』, 世界思想史, 1999.

의 자신'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얻기 위해 민족정체성을 상대화하면서 좀 더 유연한 정체성을 모색하는 모습이 아플 만큼 전해져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국적은 물론이고 민족조차 재일동포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지 오래다. 오래 전부터 재일동포사회는 '정체성과 귀속(국적)의 부정합'이라는 모순을 간직한 채 시시각각으로 정체성이 용해(溶解)되어가는 가운데 이정표 없는 내일을 모색해왔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배태(胚胎)되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시즈오카 본명 재판"에서 도쿄 고등재판소가 통명 사용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인지되어온 관행이며, 따라서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애써 일본명을 사용하는 경우 본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프라시머시로서 법적 보호에 상당하는 이익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도 재일동포 중 구정주자 대부분이 통명을 갖고 있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명의 소지 또는 사용은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한 이들의 오랜 자구책이라 할 수 있지만, 통명이 '사회적으로 인지되어온 관행'이 된 것은, 한영혜의 지적처럼⁵ 해방 후 일본 정부가 외국인등록 시 본명뿐 아니라 통명도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본명-통명' 이중구조가 재구축되었고 그 후 외국인등록, 취학신청 등 주요 국면에서 본명을 감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온 것이다.

통명을 사용함으로써 구정주자들은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성(origin)을 밝히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통명 사용이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보호받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야마하라 측이 주장하고 1심에서 인정된

4 平成27年(ネ)第3249号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東京高裁平成27年10月24日判決)

5 한영혜,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권숙인 엮음,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59쪽 이하.

부분, 즉 재일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본명과 통명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는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은 2심에서는 누락되었다. 2심에서는 인격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름은 통상 하나뿐이나 통명 사용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인지된 관행이며 법적 보호에 상당하는 이익이라는 종래의 판례를 따르면서, 재일한국인의 통명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이 본명을 사용하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통명 사용을 묵시적으로 조장하는 일본사회의 현실을 기정사실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일본’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2. 끝나지 않는 ‘재일론’⁶

“시즈오카 본명 재판”에 나타나 있는 낱실로서의 ‘사실로서의 재일’의 진행과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씨실의 교차/갈등은, 재일동포의 세대교체와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던 1985년 올드커머 2세인 강상중과 양태호 사이에 ‘재일의 나아가야 할 길’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한 논쟁의 주제이기도 했다.

강상중이 두 편의 논문에서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패전 후에도 전쟁 전의 ‘국체’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출발했던 단일민족 국가 일본이, 1970년대 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여 외국인에게도 생존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억압이 소프트해진 것일 뿐 정주를 통해 일본사회를 변화시키고 공생의 가

6 윤건차는 1980년대를 전후해서 ‘자이니치’(在日)들의 정착지향이 확고해지면서 소위 ‘재일론’이 등장하는데 ‘세 개의 국가의 틈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에스니시티 중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재일론’의 키워드는 ‘제3의 길’인데 조국지향의 ‘제1의 길’,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동화하는 ‘제2의 길’의 어느 쪽도 아닌 “민족성을 유지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면서 마이너리티로 일본에서 사는” 길을 말한다고 한다. 尹健次, 『在日の精神史3: アイデンティティの揺らぎ』, 岩波書店, 2015, 147~154쪽. 문경수는 ‘제3의 길’을, 동화도 조국지향도 아닌, “일본에서 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적 권리의 획득을 중시하는 주장”이라 한다. 文京洙·水野直樹,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岩波新書, 2015, 201쪽.

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생을 외치는 재일동포 자신이 일본 문화에 착실히 융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세 이하가 공생의 주체로서 존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조선계 일본인”으로서의 정주화는 동포들의 ‘내국민화’와 ‘천민화’를 초래할 것이다. 재일동포가 나가야 할 길은 남도 북도 부정하고 ‘재일’(在日)이라는 거점에 모든 것을 거는 ‘실감(實感)신앙’이 아니라, 재일동포와 일본, 그리고 분단 조국의 공통의 역사적 과제를 확정하면서 간접적으로 조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방법으로서의 “재일”’이며 근자의 인권, 시민권획득 운동도 이를 위한 단서여야 한다.⁷

그에 반해 양태호는 강상중에게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사실로서의 “재일”’의 진행, 즉 정주화가 의문의 여지없는 상황,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외국인의 인권’뿐 아니라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인권’의식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적과 동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강상중은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주화’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일본사회의 소수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것은 공생의 첫발이다. 현재 개개의 재일조선인이 ‘재일’을 어찌 살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는 동포사회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싹트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다수 속에 ‘천민화’의 길이라면, 일본처럼 단일민족관에 몰들어 있는 우리들 자신 속의 그리고 남과 북의 차별 구조도 물어야 한다. 소수자가 소수자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의 길이며 강상중이 말하는 “‘재일’과 일본 그리고 분단조국의 공통의 역사적 과제”에 맞부딪치는 것이다.⁸

두 사람의 논쟁 이후 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의 주류는 ‘국적’을 유지한 채 정주하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영주외국인으로서 지방 참정권 획득에

7 姜尚中, 『『在日』의 現在と未來の間』, 『季刊三千里』 42号, 1985, 夏, 118쪽; 『方法としての『在日』: 梁泰昊氏の反論に答える』, 『季刊三千里』 44号, 1985, 冬, 174쪽.

8 梁泰昊, 『事实としての『在日』: 姜尚中氏への疑問』, 『季刊三千里』 43号, 1985, 秋, 146쪽; 『共存・共生・共感: 姜尚中氏への疑問(Ⅱ)』, 『季刊三千里』 45号, 1986, 春, 173쪽.

총력을 기울여가는 속에서,⁹ 조국지향도, 동화도 아닌 ‘민족성을 유지하며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제3의 길’(의 가능성)을 둘러싼 모색을 반복했다. 하지만 ‘사실로서의 재일’의 진행이라는 낯실과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씨실의 교차 속에서 ‘민족이나 동화냐’, ‘집단이나 개인이나’라는 이항대립을 넘어 소수민족 정체성을 시대적합적으로 정립하면서 일본사회에서 공존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오키상 수상자인 올드커머 3세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의 『GO』가 재일론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책표지 앞뒤로 쓰여 있는 “No soy coreano ni soy japones. Yo soy desarraigado”(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그저 하나의 부평초)와 하드커버를 넘기면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어때서? 장미를 다르게 불러도 향기는 같은 걸”이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짐작케 한다. 『GO』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스기하라라는 일본명을 사용하는 자이니치(在日)인 주인공이 사쿠라이라는 일본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연애소설’이지만, ‘재일’과 국적에 대해 많은 것을 동포사회와 일본사회에 남긴 작품이다.¹⁰ 다시 만난 사쿠라이에게 스기하라라는 “말해두지만 나는 ‘자이니치’도 한국인도, 조선인도, 몽골인도 아니야. 나를 좁은 곳에 억지로 끼워넣으려 하지 마! 나는 나일 뿐이야!”라고 외친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한다. “내가 국적을 바꾸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큰 것에 귀속한다는 감각이 싫어서야. … 하지만 킴 베이싱어가 바꾸려면 바꿀 거야. 나에게 국적이란 그런 거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재일조선인사회가 국적 = 민족정체성이라는 논리에 집착해온 것을 생각하면 가히 쇼킹하다.¹¹ 하지만 표지 저자 소개에 가타카나로 쓰여 있는 “코리안 재패니즈”(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는 아직 실정법상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9 1993년 민단중앙본부는 종래의 ‘거류민단’이란 명칭에서 ‘거류’를 삭제했다.

10 가네시로를 비롯한 재일 문학자들의 작품을 쟈너의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Melissa L. Wender, *Lamentation as History: Narrative by Koreans in Japan, 1965~20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11 金城一紀, 『GO』, KODANSHA, 2000, 220~221쪽, 234쪽

되돌아보면 21세기의 시작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재일문제를 생각할 때도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2002년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본사회는 크게 변했고, 월드컵 공동개최로 상징되는 한일우호는 (역설적으로) 험한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한국드라마인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이른바 한류의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북한의 핵무장 노선은 일본의 '민족과 신우익'에게 새로운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씨실이 요동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거세진 혐오 발언은 일본 내의 뿌리깊은 험한 기운을 고조시켰다. 한편 재일동포사회는 강상증이 우려했던 것처럼 구정주자들의 민족정체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다양해진 동포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3. 특집의 의도와 구성 논문의 개요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이번 특집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구자 두 사람에게 의해 기획되었다. 두 책임편집자는 일본에 거주한 햇수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지만 일본에 거주하면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재일동포사회와 접해왔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재일동포사회도 한국도 동아시아라는 커다란 역사적 시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해왔음을 깨닫고 그러한 맥락 위에서 재일동포의 현재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 특집을 통해 재일 코리안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존의 문제를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따라서 집필진의 인선에서도 다양한 시점과 세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전의 특집과 달리 한국의 연구자뿐 아니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자(재일조선인,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한국인,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가 필진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목적에서다. 특집에 수록한 논문 6편, 특별기고 및 특집서평은 포스트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작금의 재일동포사회가 어디에 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가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지금까지 많은 재일동포 연구는 특히 연구서를 지향하면 할수록 과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재일동포와 일본의 현상과 나아갈 길을 둘러싼 강상중과 양태호의 논쟁 이후, 한편으로는 재일동포사회가 법적·제도적 장벽 속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모델 마이너리티로서 성장해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즈오카 본명 재판”이 배태(胚胎)되어온 최근 수십 년 간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다운 연구가 거의 없었다.¹² 이번 특집 기획이 이러한 연구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이번 호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연구대상인 재일동포를 형용하는 용어의 문제였다. 특집에 실린 8편의 논고에서는 특집 제목에 사용된 ‘재일코리안’이란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재일코리안이란 용어는 신기영과 히구치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관자 및 재일 3세인 리홍장과 김우기는 재일조선인을, 책임편집자 중 한 사람인 유혁수는 재일동포와 재일한국·조선인을 사용한다. 정진성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재일동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재일사회에서는 여전히 재일조선인이 주류인데 민족정체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재일코리안이란 용어가 일본에서 상당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¹³ 반면 ‘자이니치’(在日)라는 용어는 재일의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 용어로 그야말로 ‘일본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그 뒤에 조선인, 한국인, 한국조선인, 코리안 등 어떤 단어를 덧붙이는가에 따라 역사성과 현재성이 교차한다. 이들 용어는 다양한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특집의 제목에서 ‘재일코리안’을 사용한 까닭은 이 용어가 국적이거나 민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사람(최근에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이나 재중조선족까지 포함한)이

12 최근 간행된 文京洙·水野直樹,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도 1990년대 이후에 관해서는 매우 취약하다.

13 정진성,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호, 2012, 285쪽 이하.

라는 가장 넓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음을 밝혀둔다.

이하 각 논문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한다. 신기영의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은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 및 집단적·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개념틀로서 디아스포라론이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했다. 지금까지 재일코리안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각은 일본 내 소수민족 집단이나, 넓게는 초국가적 이주민의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은 정주국에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동화 수준을 보이면서도 귀환할 수 있는 모국(현실적 또는 상상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본으로의 귀화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점 등이 디아스포라로서 재일코리안의 역사를 고찰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1990년대 이후 주목받아온 디아스포라론은 재일코리안을 시공간적으로 정주국과 모국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민족집단으로 특징짓고,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자구도의 조건에서 형성되는 이주와 정주의 역사 및 정체성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한 디아스포라론에 입각할 때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며, 무엇이 지금까지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은 동아시아의 전후 냉전의 역사에서 형성된 사자구도(적대적인 남북한-재일코리안-일본)의 구조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단일한 집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일코리안의 복수(複數)의 디아스포라화의 역사를 듣고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조관자의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1990년대부터 국내에 적극 유입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을 서경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서경식의 저항 담론은 1990년대 등장한 일본 내 다문화 공생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세계에 흩어진 코리안의 삶을 미래 한반도의 통일국가, ‘전체 민족의 네이션’에 귀속시키는 것이 탈냉전 이후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지표와 실천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필자는 재일조선인 지식인들의 조국지향적인 당위론과 현재적 삶을 부정하거나 구체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가능성으로서 제시되는 통일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판단한다. 또한 ‘전체 민족의 네이션’론은 북한을 ‘전체 민족’에 끌어들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서경식은 1990대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에 때맞춰 재일사회에 대두한 김찬정의 공생론과 문경수 등의 ‘시민사회론적 재일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오직 ‘저항과 투쟁’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공생이야말로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새로운 가치와 방법이며, 재일조선인의 민족사적 갈등과 투쟁의 경험을 딛고서 다양한 국적의 마이너리티와 연대하고 공생하려는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체로서의 민족’ 논리에 입각한 서경식의 비타협적 민족담론이 과연 얼마나 일본과 한반도의 탈식민지화, 그리고 아시아의 탈냉전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는지 물으며,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서 현실인식을 일신하고 복잡한 관계성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지식인의 태도를 요구한다.

히구치 나오토의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는 데이터로 나타난 거시적인 직업 지위의 변화를 통해서 재일코리안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개관하려는 시도다. 지금까지 재일코리안 연구가 민족의식이나 정체성 연구에 집중되어왔으며, 대개 서술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정체성의 단순 분류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시각에서 재일코리안의 직업 변천을 규명하고자 했다. 재일코리안의 직업 변천에 대한 선행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 재일코리안의 변화를 파악한 것에 그치고 있어, 취직 차별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가, 자영업에서 화이트칼라로의 진출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세대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2009년 통계법 개정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인구 센서스(國勢調査) 데이터에 근거하여 30년간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려 했다.

필자의 전공 분야인 이민연구의 가설들, 즉 민족적 틈새시장의 개척을 통해 독자적인 상승 경로를 개척하는 에스닉 엔클레이브화, 취직 차별의 완화와 동화를 진전시킨다는 경제적 동화, 화이트칼라로의 상승 이동과 하향 이동의 집단이 분기되는 분극화라는 세 가지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재일코리안의 경우를 검증한다. 그 결과 에스닉 엔클레이브화 가설에 대해서는 에스닉 경제 이탈이 진행되는 가운데, 질적으로 지속가치가 없는 사업은 도태되고, 가치가 있는 부문은 살아남는 형태로 에스닉 엔클레이브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경제적 동화 측면에서는 일본 국적과 한국·조선 국적 집단 간의 직업상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이며, 에스닉 경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화이트칼라로 진출함에 따라 에스닉 패널티가 사라지고 경제적 동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극화의 가설에 대해서 세대의 내부보다 세대 간에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미 아시아계 이민과 비교할 때, 재일코리안은 취직 차별 때문에 경제적 의미의 모델 마이너리티의 지위에 도달하기까지 한 세대가 더 소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배외주의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지위의 간극을 해소하려면 법적·정치적 면에서의 차별대우의 철폐가 기본조건이 될 것이라 결론짓는다.

유혁수의 「전문가 집단의 현황을 통해 본 재일동포사회: 변호사와 연구자를 중심으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전문가 집단에 착목해서 그 역사적 변천과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의미가 있는 논문이다. 전문직 진출이 민족적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위상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변호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현황을 정리하여 현재의 일본사회 속의 재일동포사회의 한 단면을 조명했다. 필자는 이번 특집 중 히구치의 논문에서 규정한 ‘모델 마이너리티’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적용하여, 일부 재일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결과 및 2008년 〈한국인연구자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개인적인 체험과 고찰을 바탕으로 검증하고 있다.

1979년 6월 김경득이 외국적 변호사 제1호로서 변호사 등록을 한 후 현

재까지 일본변호사로서 등록된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 수는 2015년 4월 현재 164명에 이른다. 불과 40년도 안 된 사이에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의 인구 비례를 넘는 인원의 변호사가 배출된 것이다. 현재 일본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조선인 연구자는 1천 명에 육박하리라 추측되는데, 올드커머가 중심인 변호사의 경우와 달리 뉴커머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이들 두 전문가 집단에 히구치의 세대간 분극화 가설과 모델 마이너리티로서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미 변호사집단은 최소공배수 또는 최대공약수적인 합의 도출의 어려움,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 남북 분단 상황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의 과제에, 연구자들의 경우는 예상 외로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적 네트워크가 실효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 단체의 경우 동포사회의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및 정책 제시하는 민족계 두뇌집단 기능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리홍장의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는 ‘사실로서의 재일’이 진행되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혈통이나 국적, 이데올로기로만 정의될 수 없는 현실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더블’의 존재에 주목하여 종래의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종래 재일조선인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순혈성이나 한국·조선적의 유지, 민족명의 사용, 모국어 습득에 대한 적극성 등으로 본질화한 민족관이 지배적이었으나, 재일조선인의 경험이 다양화·개인화해 나가는 가운데 정체성의 다양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첫번째 흐름이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이화(異化)지향과 동화(同化)지향의 착종으로 파악하여 유형화한 후쿠오카의 연구다. 그의 연구는 ‘민족성의 강약’이라는 단선적인 이해를 기초로 한 탓으로 본질주의적인 연구를 오히려 조장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 흐름인 사회구축주의에 의거한 연구는 민족본질주의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그 해체를 명확히 의도한 점에

서 획기적이었으나 민족을 본질적인 기반으로 해온 재일조선인사회의 공동성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에 반해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담론 공간에서 재일조선인 개인들의 미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세 번째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데, 필자는 2006년부터 2년간에 걸쳐 <바람의 회>라는 ‘더블’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얻은 식견을 바탕으로, 그들이 과거를 어떻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를 그려내면서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의 역할을 찾으려 한다.

권향숙의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일과 정주화: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는 1990년 이후 조선족의 도일 및 정착 과정을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에 걸쳐 사는 조선족의 실태와 특징을 부각한다. 지금까지 조선족의 국제 이동이 주로 한국으로의 유입에 집중되어온 것을 생각하면 신선한 접근이다. 필자에 의하면 조선족의 도일에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조선족의 문화자본에 주목하여 도일현상의 맥락을 설명하는 연구, 일본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조선족의 이동을 고찰하는 연구, 일본으로 이동과 에스닉 커뮤니티 양상을 조명하여 글로벌화에 따른 조선족 도일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 그리고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과 결부시켜 고찰한 연구 등이 있었는데,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결여된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특히, 필자가 일본 및 한국, 중국에 분산 거주하는 조선족 가족에 대해 실시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1990년 후반 이후 조선족 유학생의 도일 배경에는 한국행을 선택한 부모 세대의 노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여 조선족의 일본행과 한국행은 한 가족 세대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족 분산을 전제로 한 재결합은 바로 조선족의 생활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함의는 단일국가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 동아시아지역

및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초국적 가족 혹은 집안’의 생존 전략이자 생활 실천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필자도 말하고 있듯이 이 글에서 제시된 가족의 분산과 재결합의 양상이 금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정호석의 특집서평 「도래하는 ‘자이니치 1세’」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출판된 재일동포 1세를 다룬 네 권의 책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이들의 삶과 기억이 새로운 문화적 위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통상의 ‘서평’의 범위를 넘어서 재일동포 1세를 다룬 책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오구마 에이지와 강상중이 엮은 『자이니치 1세의 기억』이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할 수 있는 신서 형태로 출판된 점에 주목하며, 책이 매개하는 재일동포 1세의 삶과 기억은 어떤 것인지 책에 담긴 그들의 삶을 살펴본다. 그것은 예상되듯이 가족과의 생이별과 유랑의 고통, 혹독한 가난과 모욕적인 차별로 점철되어 있으면서도 ‘체험’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탐구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입체적인 범주이며, 그들의 활동적인 행위자성과 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현재성을 보여준다. 이봉언의 『자이니치 1세, 기억의 저편』은 커다란 사진과 함께 단편적이고 함축적인 구어가 주는 증언의 효과가 강조된다. 『자이니치 코리안 여성 20인의 궤적』과 사진집 『치마저고리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가와사키 시의 후레이아기관의 고령자 교류모임 〈도라지회〉 소속 할머니들의 기억과 생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하는’ 지역 시민들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점이 강조된다. 이들 네 권의 책은 지금 일본사회에 새로이 도래하고 있는 ‘자이니치 1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필자는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 재일동포 1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래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과제를 던진다고 지적한다.

특별기고의 김우기 「재일조선인 페미니즘을 향하여: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사회운동 기록」은 최근의 20~30대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젠더의식과 성 차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논고다. 현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의 사무국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

가 ‘성차별철폐부회’를 담당하여 기획, 실시해온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성차별철폐를 위한 운동을 정리, 소개하면서, 그 운동의 일부로 실시한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내용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성차별철폐부회’는 재일조선인사회가 뚜렷한 여성정책이 없고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여성운동’도 부족한 상태에서 남존여비의 풍조가 ‘민족성의 계승’이란 표어 속에 이어져오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0년부터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학습회를 실시해,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학습회를 열었다.

부회가 실시한 2014년의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그 결과를 보면 남성응답자가 성별역할 분업에 대한 비판의식이 약하고, 여성응답자가 성희롱, 가정폭력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비가시화되어온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점은 획기적이다. 응답자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젠더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그것을 “일본의 계속되는 식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즉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해방 이후에도 생존권, 재류권, 민족교육권 등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한 제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 항상 최우선이고 필요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들끼리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남성들이 힘을 가지고 주도하는 가부장제가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 *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특집의 의도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시공간에서 재일코리안의 현재를 조명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재도 동아시아는 계속되는 남북분단과 미중의 새로운 경쟁관계 속에서, 냉전적인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탈냉전과 냉전구도가 중첩되는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

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재일동포(코리안)의 존재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 특집이 그러한 재일코리안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의 모색을 조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에, 더 나아가 세계에 어떠한 보편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남길 수 있었는가 자문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이 특집은 어디까지나 재일동포와 재일동포사회의 한 단면을 그렸을 뿐이다. 김우기의 논고가 조총련 소속의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젠더인식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조총련과 그에 소속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의 인식과 생활의 전용은 파악할 길이 없다. 납치문제가 드러난 이후 조총련과 조선학회가 시련에 봉착하면서 더더욱 말을 아끼고 있어 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조총련과 민단, 그리고 거의 존재조차 희박해지긴 했지만 한인회라는 동포단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했다.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도 마찬가지다. 재일 주류들에게 여전히 배척의 대상인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코리안 재패니즈’라는 선택지가 갖는 의미와 함축도 중요한 문제다.¹⁴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것들은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상의 특집과 관련된 글 외에도, 이번 호에는 연구논단으로 두 편의 학술논문을 더 실었다. 장경렬의 「'확대 지향'의 시 형식과 '축소 지향'의 시 형식: 시조와 하이쿠의 형식상 특성에 대한 하나의 비교 분석」은 영문학자인 필자가 한국의 전통 시조와 일본의 하이쿠에 대해 비교를 시도한 도전적인 연구의 성과물이다. 정진성의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1990년대 이래 추진해온 구조개혁이 기존의 ‘일본형 경제시스템’에 가져온 변화의 양상을 고찰한 연구다. 전자가 학제적 관점에서 새로이 시도된 것이라면, 후자는 일본 경제사에 묵직하게 천착해온 필자의 그간의 연구가 축적된 성과라 여겨진다. 학술적 수준과 대중적 관심을 함께 충족하고자 하는 『일본비평』에 적합한, 귀한 글을 투고하여 주신 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14 윤건차를 비롯한 재일 주류의 ‘재일론’은 국적유지를 전제로 한다.